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 후원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섭) | 전국학생행진 (stulink.jinbo.net | stu_link@daum.net | 후원 국민은행 488402-01-301184 최은혜) | 대학생평화네트워크 <사이시선> (facebook.com/saisison.peace | 회원가입 010-6396-8675 김태홍)



박근혜 파면은 촛불 시민의 위대한 승리

재벌-사드-노동권 축소 적폐에 맞서 온누리에 민주주의를!

봄이다.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끈질기고 견고한 연대와 불굴의 저항이 이룬 승리다. 야당들이 탄핵의 결을 머뭇거리며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할 때, 사법부가 물주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뒷걸음질 칠 때, 촛불은 더 활활 타오르며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파면은 누구의 승리인가? 야당 정치인들인가, 재판관인가? 아니, 주권자 자신의 승리다. 이 땅에서 '개돼지'라 천대받고 '국민들은 어차피 곧 잊어'라며 무시당했던 노동하는 시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파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정문에서 현재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촛불이 박근혜 파면 결정의 원천임을 공식 인정하는 셈이다.

미완의 승리

물론 박근혜 탄핵을 '완벽한 승리'라 말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희 문건' 보도 관련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박근혜는 끝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 의혹이 팽

배한 만큼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세월호 참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관련 헌법상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 상의 의무는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절충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 역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는 최순실의 재단 설립과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박근혜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번 게이트에서 드러난 재벌과 권력자 간 관계가 철저한 거래 관계였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재벌들의 돈이 명백히 뇌물이고 헌법상 규정한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다. 재벌들이 박근혜에게 준 수백억 원은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해고로 내몰아 착취하고, 국민연금을 강탈한 돈이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한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박근혜는 파면됐다.

'촛불 꼬리'는 안면몰수 보수언론

게이트 초기 촛불을 긍정적으로 보도 하던 보수언론은 새누리당 분열과 반기문 불출마로 대신 국면이 뜻대로 되지 않자, 태도를 바꿨다. 색깔론을 들이대는가 하면, 박근혜 물주 이재용을 두둔하는 후안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야 한다',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정도가 심각하다. 가당치 않은 소리다. 이는 촛불의 지속이 보수 재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누구 맘대로 중단한단 말인가? 안면몰수도 이 정도면 연기대상 감이다.

승복해야 하는 건 무엇이든, 누구인가? 보수언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더러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삼성왕국을 일구는 일등공신이었던 보수언론은 떠들 자격이 없다. 오히려 청산 대상이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봄을 만들자!

이제 우리는 적폐 청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박근혜, 우병우 등 범죄자들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고, 삼성 이

재용은 뇌물과 불법 경영세습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벌 체제는 견고하고, 부익부빈익빈 사회, 때만 되면 '북풍'을 소환하는 평화 위협 행태는 여전하다. 탄핵 정부의 황교안 대행은 외교적 노력은커녕 사드를 줄속으로 추진하며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임금 체불액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조합 탄압은 난무하며, 가계부채와 실업난은 사상 최악이다.

박근혜 파면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대선 기간은 짧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광장과 일터, 삶터에서 촛불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누구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가진 자들의 논리에 부역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면 동료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자. 그것이 지난 133일 간 우리가 확인한 주권자의 힘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싸울 것인가? 촛불 시민은 아래 과제를 함께 확인하자. 첫째, 사회 불평등과 불법 경영세습 해결을 위해 시민의 힘으로 재벌 체제를 개혁하자. 둘째,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확보하자. 셋째, 한중일 민중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전 국민 평화운동을 펼치자!

우리는 박근혜 파면과 함께 봄을 맞고 있다. 이제 일터와 삶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일궈나가자.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며, 박근혜 파면 만세! 촛불 민주주의의 승리! ●

평화를 위협할 사드, 촛불이 막아내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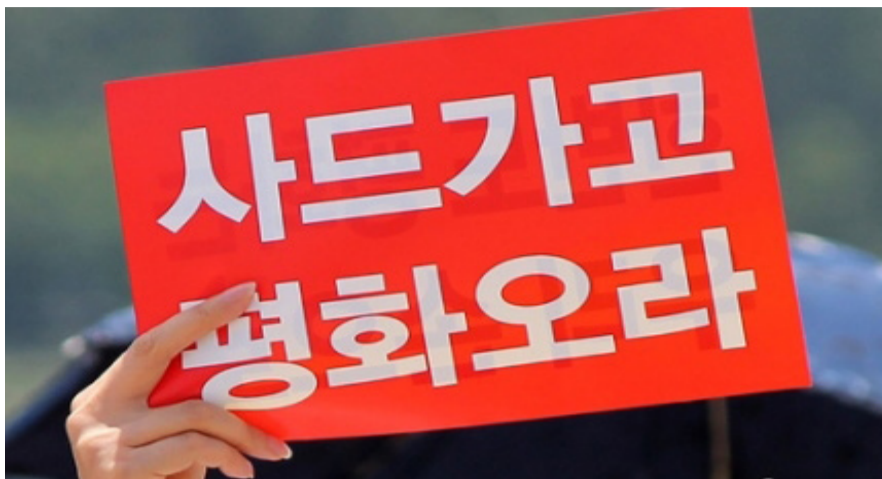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반발은 냉정한 현실이다. 사드 배치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으로,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전쟁위기행 특급열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직접 “한국과 일본에 MD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MD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미국은 가장 위협적인 ‘적국’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아시아 MD를 강화하고 있다. MD라는 ‘절대방패’를 통해 보복공격 위협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3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일본



까지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MD 훈련이 실시되고, 핵 항모는 2척이 동원된다. 거기다 트럼프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까지 꺼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맞서기 위해 군비를 증강할 것이다. 이는 다시 미국의 야욕을 강화시키며 꼬리를 물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군사 갈등의 기폭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을 전쟁 위협 가운데로 몰고 갈 사드 배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드가 안보다?

사드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막으려는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 및 평화단체가 주장하는 것도 이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귀를 막고 있다. 사드를 찬성하는 이들도,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하는 이들도 사드를 ‘안보’ 문제로 볼 뿐, 사드가 군사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북풍 쫄음을 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전술핵 배치까지 쌍수 들고 환영하며, 어떻게든 대선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슈로 삼으려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언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유력 야당 대권주자들은 수수방관 중이다. 문재인과 안희정은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극우세력의 속전속결 사드 배치를 방관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한 번도 사드 배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 “나한테 맡겨주면 잘 해보겠다”는 말만 할 뿐이지,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평화 위협 사안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전혀 없다. 보수세력과 같은 지반에 있는 것이다.

촛불이 평화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들은 반드시 사드를 막아낼 것이다. 지난 여름부터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하루도 빠지 않고 평화촛불을 밝혀왔다. 이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낸 전국의 촛불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평화위협 사드를 내쫓아버릴 때다. ●

탄핵정국 틈탄 사드 날치기 배치

2월 27일 롯데 이사회, 28일 국방부-롯데 부지교환계약, 3월 6일 사드 포대 일부 한반도 도착.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속전속결이다. 4월 안에 배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작년 11월 초까지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8~10개월 내 전개’를 말했다.

결국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다급해져 사드 ‘알박기’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세가 바뀌어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수작이다.

대선 전 ‘알박기’ 위한 꼼수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위협에 대한 우려도 넘쳐난다. 때문에 충분한 법적 절차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 절차도, 주민의견 수렴도, 국회비준 절차 요구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날치기 배치다. 뒷거래로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및 신동빈 회장 사면과 사드를 배치할 성주 골프장을 바꿔먹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을 건너뛰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

실효성 없는 한미 논의, 원천무효!

정부와 일부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는 국가간 합의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간 정식 합의문 같은 것은 없다. 한미 소장급이 서명,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 뿐이다.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도,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 조차 아니다. 강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박근혜정권 부역자들이 결정할 일 아냐

황교안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책의 손발이었다.

이들은 사드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해치우려

한다. 나라를 이보다 더 망칠 수는 없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평화가 걸린 사드 배치를 결정할 자격은 결코 없다.

사드는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이 꼽은 적폐 청산의 6대 긴급현안이다. 박근혜정권의 실상이 날날이 드러나면서 사드 반대여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강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때까지 촛불은 사드 저지로 향해야 한다. ●

